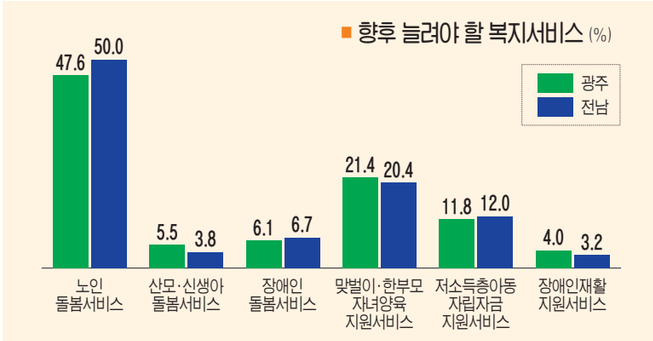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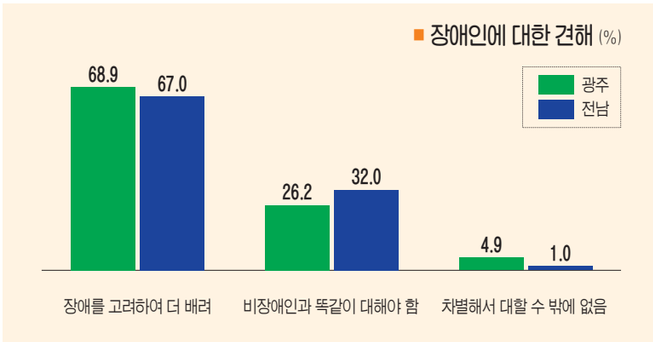
호남지방통계청 '2009 광주·전남 사회조사'

10명중 6명 "사회보험료 부담 너무 크다"

광주·전남 지역민 10명 가운데 6명이 가계 소득을 감안할 때 사회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부담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구독률은 광주가 72.0%로 전국 평균(71.4%)을 웃돌았으며, 전남은 54.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시·도민들의 소득 분배와 본인 소득 수준에 대한 불만 정도는 모두 전국 평균치를 넘어섰다. 이는 호남지방통계청이 만 15세 이상 가구원 1천8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2009 광주·전남 사회조사' 결과다.





복 지

사회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광주의 경우 69.2%로 전국 평균(66.2%)을 웃돈 반면 전남은 63.4%로 2년 전보다 0.6% 포인트 완화됐다.

광주·전남을 통틀어 가계 소득에 비해 가장 부담되는 사회보험료는 건강보험이었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뒤를 이었다.

광주는 국민연금이 66.9%, 건강보험 69.2%, 고용보험 43.8% 순으로 부담을 느꼈고, 전남은 건강보험이 63.4%로 부담 정도가 가장 컸다. 국민연금은 63.0%, 고용보험은 42.0%였다.

향후 확충돼야할 공공시설로는 보건의료 시설이 광주 20.5%, 전남 2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순이었다.

광주는 전남에 비해 공영 주차시설과 공원·유원지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체육시설 및 경기장 확충 수요가 각각 5.7%로, 전국 평균 5.6% 보다 높았다.

가장 시급한 복지 서비스로는 노인 돌봄 서비스가 광주 47.6%, 전남 50.0%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서비스와 저소득층 아동자립자금 지원서비스 등이 차지했다.

우리 사회의 교육과 고용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장애인 차별 정도에 대해선 광주 84.7%, 전남 70.5%가 '심하다'고 답했고, '전혀 없다'는 응답은 2.1%와 1.7%에 그쳤다.

집 주변에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재활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광주 87.8%, 전남 97.4%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나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반대하거나 절대 안된다'는 의견이 2년 전에 비해 광주는 5.8%에서 12.2%로 증가, 님비현상의 심화를 방증했다.

반면, 전남은 3.9%에서 2.6%로 줄었다. 우선 확대해야 할 장애인 복지 사업으로는 장애수당, 의료비, 고용 및 직업재활 순으로 나타났다.

한맺힌 오열 일본 정부가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 동원한 한국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유족들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1인당 99엔(1천300원)을 지급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24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광주 출신 양금덕 할머니가 땅을 치며 오열하고 있다.〈관련기사 6면〉 /연합뉴스

신문 구독률 광주 72%·전남 54%…독서량 줄어

문화·여가

신문 구독률은 광주 72.0%, 전남 54.5%, 성별로는 남자 78.9%, 여자 65.6%를 기록했고, 인터넷 신문의 경우는 여성구독률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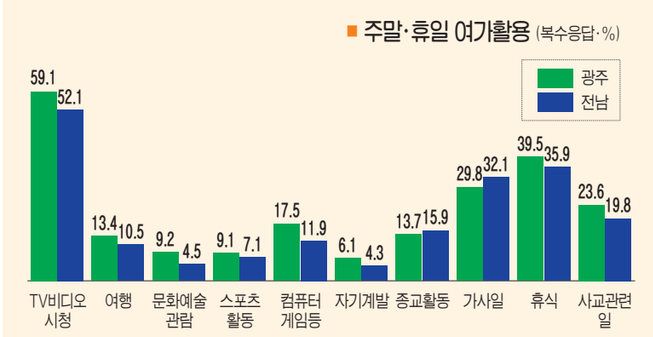
지난 1년간 독서인구는 광주 63.2%, 전남 49.5%를 기록한 가운데 남성은 직업서적, 여성은 잡지류 독서 비율이 높았다. 1인당 1년 동안 평균 독서량은 광주 10.2권, 전남 7.6권으로 2년전보다 광주는 2.1권, 전남은 0.8권 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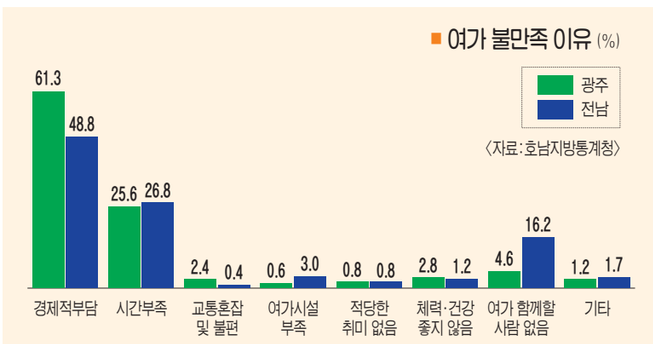
지난 1년간 공연, 전시, 스포츠경기를 한 번이라도 관람한 사람은 광주 58.0%, 전남 44.3%로 2007년보다 광주는 0.1%포인트 오른 반면 전남은, 3.3%포인트 감소했다.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해보고 싶은 여가 생활로는 광주는 여행, 자기계발, 스포츠활동, 전남은 여행, 휴식, 사교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여행횟수는 광주 3.5회, 전남 2.8회로 2년 전보다 각각 0.9회, 0.5회 증가했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레저 시설 이용 부문에서 관광명소를 가장 선호했으며, 해수욕장, 온천장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명소, 온천장 등의 레저 시설 이용자는 광주 67.6%, 전남 67.9%로 지난 2007년에 비해 1.7% 포인트 상승했다.

TV시청을 주말이나 휴일의 주된 여가라고 응답한 비율은 광주 59.1%, 전남 52.1%로 가장 높았다.





소득 활동 인구 10년전에 비해 6~10% 늘어

소득·소비

소득분배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답변 비율은, 광주·전남 모두 지난 2007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인 75.6%, 73.1%를 보였지만, 전국 평균은 2년 전 76.9%에서 올해 70.1%로 6.8%가 떨어졌다. 이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의 형평성에 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또 농촌지역에 살고,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고 했으며, 이에 반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고학력자일수록 공평하다고 응답했다.

1천872명의 조사대상자 중 소득이 있는 비율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62.6%, 69.2%로, 지난 1999년 조사에서의 56.4%, 59.8%보다 6~10%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지역 내 경제활동 인구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맞춰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이 10년 전의 10.5%, 11.5%에서 올해 11.5%, 13.9%로 소폭 늘어났고, 불만족 수치도 각각 45.7%, 49.8%에서 45%, 46.3%로 조금 줄었다.

젊은층 직장 선택 수입〉안정성〉장래성 順

노 동

올해 조사와 11년 전인 1998년 사회조사와 비교할 때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이 직업선택요인이었다. 올해 조사대상자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으로 밝힌 것은 광주·전남 모두 '수입'으로 35.7%, 34.2%를 보였으며, 다음이 '안정성' 34.2%과 33.8% 였다. 그러나 11년 전 지역민들의 41.8%와 45.8%가 '안정성'을 꼽았으며, 수입은 16.9%와 22%로 2위였다.

1998년에는 '발전성과 장래성'도 각각 20.1%, 15.7%로 높은 순위였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각각 6.7%, 6.2%로 급락했다. 지역민들이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수입을 중시하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사례다.

이 같이 바뀌는 직업 인식은 젊은이(15~29세)들이 근무하고 싶은 직장 선호도에도 변화를 줬다. 과거보다 공무원 비중은 줄고, 이보다 보수가 높은 공기업이나 공사, 전문직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3년 전인 지난 2006년 조사에서는 국가기관이 광주·전남 각각 44.1%, 42.8%였으나 올해는 41.5%, 35.7%로 줄고, 대신 공기업(공사) 13.5%와 11.8%에서 17.5%와 18.8%로, 전문직 기업 12.6%와 14.8%에서 15.2%와 16.0%로 늘어났다. 공무원을 선호하는 비율은 광주·전남 모두 전국 평균인 28.6%보다 여전히 높았다. 여성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광주·전남 각각 84.4%와 84.6%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윤현석·윤영기기자 chadol@